

트럼프 2기 보호무역 및 지정학 전략: 베네수엘라 ·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

이경락 백석대 교수

개요

이 발표문에서는 트럼프 2기의 관세·보호무역 정책과 베네수엘라, 이란을 둘러싼 군사행동을 통합된 하나의 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한다. 핵심 가설은 미국의 경제·군사 조치가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 견제, 미국 제조업 기반의 재건, 만성적 무역적자 완화, 달러 기축통화 지위 방어, 그리고 트럼프의 국내 정치 기반 강화라는 복합 목적 아래 추진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 제기

기존 연구는 대체로 세 갈래로 나뉘는데, 첫째는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을 통상정책의 범주에서 분석하는 연구이고, 둘째는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 개입을 지정학과 안보전략의 문제로 보는 연구이며, 셋째는 미국 제조업 쇠퇴와 무역적자, 달러 패권 문제를 국내정치경제 차원에서 다루는 연구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위의 세 영역(통상정책, 안보전략, 국내정치)이 분리되어 각각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관세정책은 대중국 압박인 동시에 미국 내 유권자에게는 제조업 재건의 메시지이며,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행동은 에너지·자원·해상통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 견제와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구 가설

본 발표의 중심 가설은 다음과 같다.

“트럼프 2기의 관세·보호무역과 군사·자원 전략은 궁극적으로 중국의 세계적 부상을 억제하고, 미국의 약화된 제조업 기반과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를 완화하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방어하고, 동시에 국내 정치 기반을 결집하려는 복합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이 가설은 두 층위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정책 의도이며, 둘째는 그 정책의 실제적 효과이다. 정책적 의도는 미행정부의 공식적 발표와 정책 설계에서 찾을 수 있고, 그 효과는 무역흐름, 유가, 공급망 재편, 제3국 우회수출, 금융시장 변동성 등의 실증적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틀

본 연구는 국제정치경제에서의 다음 세 가지 관점들을 결합하여 트럼프의 정책들을 복합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현실주의적 관점: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패권국의 견제 전략이다
- 중상주의적 관점: 미국은 전략은 관세와 자원 통제를 통해 제조업과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일종의 경제전략이다
- 국내정치적 관점: 미국은 전략은 제조업 쇠퇴 지역 유권자와 보호무역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전략이다

베네수엘라 사례

베네수엘라 사례는 석유자원 쟁탈과 반미정권 타도, 그리고 지정학적 이해충돌의 결합을 보여주는 시험대다. 특히 최근의 사건은 단순한 정권교체 압박을 넘어 자원 통제와 지역질서 재편의 문제와 연결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단지 인권 또는 민주주의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실제로는 에너지 자원과 서반구 질서의 재편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란전쟁

이란문제는 에너지 수송로와 유가, 그리고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를 압박하는 전략적 사안이다. 다만,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경제와 특히 아시아 제조업에 직접적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란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 그 자체보다 경제적 파급 효과이다. 공개된 보고서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송 차질, 유가 상승, 물류·환율·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미국내 서민들과 특히 한국과 같은 제조업 중심국가에 복합충격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목은 “트럼프 2기 보호무역 및 지정학 전략: 베네수엘라·이란 사례를 중심으로”이다. 본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의 군사·자원 관련 행동을 각각 분리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일련의 전략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이다. 더 나아가 트럼프 정책들에 대한 보다 입체적인 시각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전략적 진화과정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보호무역, 베네수엘라에서의 강경 행동, 이란과의 군사 충돌, 그리고 향후 쿠바를 향한 전략적 압박 가능성은 서로 별개의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 개별적 정책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중국 견제, 미국 제조업 복원, 만성적인 무역적자 개선, 약화된 달러 패권 방어, 그리고 정치적 지지 기반 결집이라는 공통 목적 아래 수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미국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트럼프 1기에 시행된 대중국 관세조치가 바이든 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지속되었고, 그 결과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은 정체된 반면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자료). 동시에 중국의 대미 간접 우회수출도 함께 늘어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단순한 대중국봉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이중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대외적(또는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압박하고, 대내적(또는 정치적)으로는 미국 제조업 쇠퇴 지역 유권자에게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트럼프식 보호무역 정책은 경제정책인 동시에 정치동원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베네수엘라 사례를 보면, 2026년 1월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였는데, 이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의 급격한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권교체 차원이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자원과 라틴아메리카 질서를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여진다. 즉, 미국이 자원 접근성과 역내 영향력 회복을 통해 남미지역에서 중국의 에너지 확보와 전략적 입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란 사례는 보다 명확한데, 2026년 2월 28일 발생한 미국-이란간 군사 충돌은 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현실화시켰고,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수송 차질, 유가 상승, 물류 및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산업연구원에서는 두바이유 가격이 전쟁 발발 전 배럴당 약 72달러에서 최근 약 103달러까지 40% 이상 급등하였으며,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한국 제조업 평균 생산비용이 약 0.71% 증가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란 사례도 중국견제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중국은 중동 에너지와 해상수송로에 대한 안정적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동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증폭은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된다. 따라서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외교적 주도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분쟁 개입이 아니라, 중국의 장기적 부상을 견제하는 간접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 모든 정책이 미국 제조업 복원과 무역적자 개선, 달러 패권 방어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딜로이트 자료는 미국이 만성적 무역적자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관세문제뿐 아니라 저축·투자 구조와 달러의 국제적 역할까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관세정책만으로 무역적자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세정책은 정치적으로는 강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제조업 쇠퇴 지역 유권자에게는 “중국에 빼앗긴 일자리를 되찾는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적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든가 정치적 효용은 상당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 발표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지정학적 군사행동을 하나의 복합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보다 일반적이며 설명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둘째, 그 전략의 핵심 목표는 중국 견제, 공급망 재편, 에너지와 해상통로 통제, 그리고 미국 내 정치 기반

결집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러나 그 효과는 단선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예컨대, 대중국 관세는 중국의 직접수출을 줄일 수 있어도 제3국 우회수출을 늘릴 수 있고, 무역적자와 달러 약세문제는 관세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넷째,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례는 각각 자원과 에너지, 지정학과 공급망 차원에서 이 전략의 외연을 보여주지만, 이 전략이 미칠 실제적 효과는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발표가 제안하는 최종 명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행동은 개별 조치들의 단순 합이 아니라, 미국 패권의 재조정과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복합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들은 정치적으로는 강한 동원효과를 가지지만 경제적으로는 우회효과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물가상승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중심의 우방체제의 붕괴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한국은 미중무역 전쟁을 둘러싼 무역, 군사 분야의 전략적 충돌의 최대 실험장이 되고 있다. 둘째, 미국이 수행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전략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트럼프의 1단계 전략이 지닌 한계와 위법성을 극복하기 위해 2단계 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하였을 것이고, 이 전략은 상당한 경제적 이권과 정치적 지지를 이끌어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트럼프 정권은 더 나아가 대중국 에너지 우방국인 이란을 타격함으로써 chokepoint 확보전쟁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략이 진화중인 것으로 볼 수 있다.

1단계 : 일방적 관세정책 (경제적 압박)

2단계 : 베네수엘라 강경정책 (자원 지정학)

3단계 : 이란전쟁 (글로벌 에너지 chokepoint 확보)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무역로 및 석유, 가스 수송로, 해군이동로로 전략적 가치를 지니는 chokepoint 지역에서의 분쟁은 즉각 글로벌 충격으로 확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패권경쟁은 영토가 아니라 국제정치, 경제, 안보질서를 좌우하는 chokepoint 확보전쟁으로 진화 중이다.

결론

본 발표를 통해 향후 연구에서는 “미국이 무엇을 의도했는가”에서 “그 의도가 실제로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는 단계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앞서 제기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변수들(트럼프의 정책 효과를 검증할 변수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무역효과 변수(종속변수) : 미국의 대중 수입 감소, 한국·멕시코·베트남 등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 여부

2. 제조업 변수(종속변수) : 제조업 고용, 설비투자, 리쇼어링 및 현지투자 유입 변화

3. 달러 변수(종속변수) : 달러결제 비중 변화, 미 국제 수요, 주요국의 탈달러화 담론과 실제 결제행태의 차이

4. 에너지 변수(종속변수) : 두바이유 · WTI · 브렌트유 가격, 호르무즈 해협 통과 리스크, 운임 및 보험료 변화

5. 정치 변수(종속변수) : 미국 중서부 제조업 지역 유권자 반응, 보호무역 지지율, 트럼프 지지층의 재결집 여부

6. 관세정책 변수(독립변수) : 대중국 관세율, 보편관세 여부, 상호관세 부과국 목록, 발효 및 유예 시점

이러한 변수도출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국의 무역수지¹⁾ = f(관세정책)

(2) 미국의 무역수지 = f(관세정책, 베네수엘라 사건)

(3) 미국의 무역수지 = f(관세정책, 베네수엘라 사건, 이란전쟁)

1) 종속변수인 무역수지는 무역효과 변수, 독립변수인 관세정책은 관세정책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면 된다. 또한 종속변수인 무역수지 대신에 제조업 변수, 달러변수, 정치변수, 에너지 변수를 넣어 다양한 관계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가설 (1), (2), (3)을 통해 미국의 전략변화 과정에서의 각 전략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설명력(영향력)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즉, 각 전략들이 구사된 이후 시차를 통한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략의 실제적 파급효과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트럼프 2기 보호무역 및 지정학 전략: 베네수엘라 ·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이경락
		논찬자 (소속)	주만성 (예장 총회 신학교/ 교수)

1. 연구의 의의 및 핵심 논지 분석

본 논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을 단순한 즉흥적 고립주의나 통상 압박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넘어 통상정책, 안보전략, 국내외정치경제학적 목적이 융합된 ‘복합전략(Complex Strategy)’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저자는 트럼프 2기에 들어서 나타나는 일련의 행위들, 즉 포괄적 관세 부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이란에 대한 군사적 개입 등을 '중국 억제', '미국 제조업 재건', '달러 패권 방어', '국내 표심 결집'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기적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군사 행동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견제 수단이라고 본 것은 거시적 거버넌스 시각이라 할 수 있다. ¹⁾

본 논문은 최근 미국, 중국, 이란 등을 둘러싸고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를 지난날의 파편적 시각이 아닌 ‘지경학적 통합 대전략(Geoeconomic Grand Strategy)’ ²⁾

차원에서 분석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지경학적 통합 대전략’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핵심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세, 통상, 금융, 공급망, 자원 등 다양한 ‘경제적 수단’을 군사·안보적 전략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하는 거시적 국가 대전략을 의미하는데³⁾ 이것은 전통적으로 "무역은 통상 부처에, 군사는 국방 부처에" 맡기던 방식과는 달리 나타나는 최근의 국제 정세의 변화라 할 수 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군사력 중심의 '지정학(Geopolitics)'이 국제 질서를 지배했다면, 오늘 날의 패권 경쟁은 경제가 곧 안보가 되는 '지경학'의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교수의 연구논문은 오늘 날의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를 잘 직시하고 있다.

2. 학술적 기여

전통적인 국제정치학의 현실주의 패권 경쟁 이론을 구체적인 실증적 수치(미국채 10년물 금리 4.67%, CPI 3.8%, 두바이유 배럴당 103달러 등)를 들어 잘 설명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와 이란 사태를 단순한 인권이나 지역 분쟁의 틀을 넘어 ‘초크 포인트(Chokepoint: 해상수송로 요충지) 패권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하고 있다. 초크 포인트란 국제 해상 운송에서 대안로를 찾기 어렵고 통행량이 밀집되어 있어,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글로벌 세계 경제가 즉각적으로 마비될 수 있는 '전략적 목줄(병목 지점)'을 의미한다.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약 60% 이상이 몇 개의 핵심 초크 포인트를 통과하는데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Strait of Hormuz),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시아 물류의 핵심인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 수에즈 운하 (Suez Canal) 등이 그것이다.⁴⁾ 비단 이번 호르무즈 해협을

돌러싼 사태 뿐 아니라 지난 날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유사한 사태도 자주 있었다. 이처럼 초크포인트는 단순한 지리적 통로를 넘어 현대 국제정치경제학(IPE)에서 패권국의 강력한 지경학적 무기(Geoeconomic Weapon)로 작동된다. 예를 들어 중국과 같은 거대 제조업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수입해야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나 말라카 해협이 통제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급격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한국 역시 원유와 천연가스 등 핵심 에너지의 90% 이상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제조업 중심 국가이기에 초크포인트 리스크는 한국의 국가 안보 및 통상 전략 수립에 대단히 중요한데 본 논문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대응 방향성을 제시함에 있어 미국의 정책적 의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제3국 우회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인 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한국 제조업 생산비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유가 10% 상승 시 생산비용 0.71% 증가)⁵⁾를 계량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명확히 실증하였다.

3.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무엇 보다 시사성이 매우 높으며 정교한 자료 분석을 통해 당면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높은 공신력을 제공하고 있다. 본문에서 지적된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 국채금리 상승, 동맹 체제 균열 등은 전략의 '의도된 결과'라기보다는 '전략적 비용 또는 부작용'에 가깝다고 보는데 저자의 견해는 어떠한지 궁금하다.

그리고 저자는 결론 부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다자 협력체제 중심의 국제질서 전환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외교부가 2025년도에 표방한 내용⁶⁾이다. 그런데 저자도 지적한 바 2026년도에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치 못한 일련의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외교 백서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그리고 국제 정치경제학에서 자주 다뤄지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은 양자주의(Bilateralism)⁷⁾와 중상주의(Mercantilism)⁸⁾로 알고 있다. 미국은 철저히 양자주의(Bilateralism)와 중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저자의 논문에서는 중상주의라는 표현이 단 1회(p.3)나타나고 있으며 양자주의와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한국이 어떻게 다자주의를 관철하고 공급망 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트럼프 2기에 나타난 일련의 행동들로 인해 표면화된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거시 경제적·지경학적 입장(stance)을 잘 보여 줌으로 향후 국제 정세에 대처하는 원론을 잘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방법론적 시나리오가 추후에 더 연구 되면 국제적 학술 가치가 높은 논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

1)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미두로 축출 작전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 경제안보 동향 리뷰 26, no. 2 (2026): 12-15.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미·중 패권 경쟁의 지경학적 전환과 한국의 대외 전략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

원, 2025), 87-89.

- 3) Robert D. Blackwill and Jennifer M. Harris, *War by Other Means: Geoeconomics and Statecraf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6) ; 로버트 블랙웰·제니퍼 해리스, 『지경학: 경제 수단에 의한 전쟁』, 박형기 역 (서울: 글항아리, 2017)
- 4)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EIA), "World Oil Transit Chokepoints," EIA Analysis, last modified July 25, 2023; 김철수, 「해상 교통로(SLOC)의 안전관과 지경학적 리스크: 호르무즈, 말라카, 수에즈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5, no. 3 (2025): 112.
- 5) "국제유가 10% 상승 시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은 평균 0.71% 증가"한다는 수치와 분석 프레임의 정확한 출처는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의 최신 연구 보고서이다. 산업연구원 (KIET),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2026년 3월 16일.
- 6) 대한민국 외교부, 2025 외교백서: 글로벌 중추국가와 다자협력 (서울: 외교부, 2025), 45-47.
- 7) 양자주의는 국제 관계 및 세계 경제 질서에서 복수의 주체가 아닌 두 주체(국가)가 직접적인 상호 협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외교 및 무역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다수의 국가가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협력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8) 중상주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의 절대왕정 시기를 지배했던 경제 이론 및 정책 체제로, "국가의 권력과 부는 축적된 금·은 등 귀금속(화폐)의 절대량에 비례한다"고 파악하는 국가 중심적 경제 기조이다.